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만든다

- 3. 15. 문체부와 산업부, 국토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 발족
- 청년 근로자,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산단 문화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 제도개선 등 추진

문화와 산업, 국토를 담당하는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3월 15일(금)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14차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곳이다. 그러나 현재는 노후화 및 생활·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업들의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 22.)에서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등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6일, 울산과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협업한다.

이번 특별전담팀은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이끌고, 부처별 담당자와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특별

전담팀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 국토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기반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 ▲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 방안, ▲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 산업단지 내 문화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

문체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며 “이번에 논의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처럼 전국 어디서나 온 국민이 윤택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머리를 맞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2611)
		담당자	사무관	지나은 (044-203-2631)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장	김종우 (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최준혁 (044-203-4407)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민태 (044-201-3674)
		담당자	사무관	조계환 (044-201-3677)

